

충남리포트 제242호

ChungNam Report

2016. 10. 14.

충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방향

여 형 범

충남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 책임연구원, hbyeo@cni.re.kr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를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의 국내외 동향 및 사례를 토대로 충남 ODA 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음

CONTENTS

〈요약〉

1. 공적개발원조(ODA)의 개념 및 국내 ODA 추진체계
2.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자체 국제개발협력의 역할
3. 국내·외 지자체 ODA 사례
4. 충남의 ODA 사업 추진방향
5. 정책제언

요약

- 공적개발원조(ODA)는 국제개발협력 중 기술 협력, 물적 자금 등 각종 형태로 최빈국이나 개도국을 지원하는 개발원조 중에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국제개발원조 활동을 지칭함
- 국내 지자체들의 ODA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 ODA 전략 및 통합추진체계 하에 추진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ODA에 대한 국내외적 규범에 충실하면서도 충남의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 ODA 추진이 필요함
- 충남 ODA 추진 방향으로 국내·외 ODA 동향을 반영한 충남 ODA 기본 원칙 정립, 충남 ODA 추진 조직 등 기반 조성, 충남 ODA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 충남 ODA 중점사업 발굴을 제시하였음
- 충남 ODA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과 ODA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주체를 발굴하며, 행정적 기반(조례, ODA 전담 인력)을 보완하고, 기존 충남의 '국제협력 사업들을 ODA 사업과 연계하고, 충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가칭)'수립이 필요함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반영하여 사회 분야(농업·농촌개발, 적정기술), 경제 분야(공정무역, 사회적기업,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생태·문화관광), 환경 분야(기후적응, 환경영향평가)의 ODA 사업을 충남의 특성을 살린 충남형 ODA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3농혁신, 금강비전, 생태복원 등 충남의 정책사업들은 저개발국 지속가능발전의 모범 대안이 될 수 있음

공적개발원조(ODA)의 개념 및 국내 ODA 추진체계 ◀

01

- 일반적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 상호 간, 개발도상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해소하며 세계인권선언이 주창하고 있는 천부적 인권을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노력과 행위”를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또는 줄여서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이라고 함(KOICA ODA교육원, 2013: 98)
- 국제개발협력 중에서도 공여국이 수원국(recipient country)에 기술 협력, 물적 자금 등 각종 형태로 지원하는 활동을 원조 혹은 개발원조라고 하고, 개발원조 중에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서 규정한 조건(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적기관이 OECD DAC에서 지정한 수원국에 최소 25% 이상을 증여)을 충족하는 활동을 지칭함(한국국제협력단, 2014)
- 국내 ODA 사업은 1987년에 시작되었는데, 1987년에 당시 재무부가 300억 원을 출연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창설하고 한국수출입은행에 유상원조를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을 위탁하였으며, 1991년 당시 외무부 산하에 무상원조 전담기관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설립하였음(하현선, 2014)
- 현재 우리나라 ODA 사업의 추진체계를 총괄·조정 기관, 주관 기관, 시행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총괄·조정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맡고, 유상원조 주관은 기획재정부, 무상원조 주관은 외교통상부가 책임지며, 유상원조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 무상원조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시행하고, 이 외에 중앙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ODA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하현선, 2014)

[표 1] 우리나라 ODA 사업 추진체계

구분		총괄·조정	주관기관(시행기관)
양자원조 (Bilateral Aid)	유상원조 (상환의무 有)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무상원조 (상환의무 無)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및 40여개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다자원조 (Multilateral Aid)	국제금융기구		기획재정부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및 20여개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료 : 하현선, 2014

- 국내 ODA 사업 규모는 2010년 11.7억 달러에서 2014년 18.5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여 GNI 대비 0.13%를 차지함
- 국내 ODA 사업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2010년 제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기획재정부 및 외교부는 5년마다 국제개발협력정책의 기본방향, 국제개발협력 규모 및 운용계획, 중점협력대상국 중기지원전략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계획을 기초로 매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여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적인 ODA, 내실 있는 ODA, 함께하는 ODA를 추진방향으로 제시하며, 1차 계획과 달리 유·무상원조 간 통합전략 강화, 하향식 전략적 계획 수립, ODA 사업의 질적 제고, ODA 평가 및 환류 시스템 강화, 참여를 통한 시너지 창출, 세계시민으로서 ODA에 능동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음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자체 국제개발협력의 역할 ◀

02

1)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설정

- 2001년 유엔총회는 빈곤, 질병, 환경파괴 등과 같은 전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이행해야 할 개발 관련 8개 과제를 담은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 합의한 바 있음
- 2015년 9월 새천년개발목표를 대체하기 위해 UN사무총장 산하의 전문가 그룹과 UN 회원국의 공개작업반이 주도하고 시민사회, 기업, 연구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수립되었음
- UN에서 최종 합의된 내용을 담은 문서인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전환: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담고 있음
- 새천년개발목표가 주로 저개발국 및 최빈국의 절대적 빈곤, 위생, 성 등 사회적 목표에 치중한 반면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저개발국 및 최빈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목표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표 2] 새천년개발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비교

구분	2001년 새천년개발목표(MDGs)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범위	사회발전 중심	지속가능한 발전(경제, 사회, 환경 포함)
달성 주제	극심한 빈곤 중심	모든 형태의 빈곤과 불평등 감소
달성 대상 국가	개발도상국이 달성해야 하는 문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공통의 문제
재원 마련	개발재원: 공정개발원조(ODA) 중심 (공여국 → 수원국)	국내공공자원(세금), ODA, 민간자원(무역, 투자) 등 다양
감시와 모니터링	자발적으로 이행을 유엔에 보고	유엔이 주도하여 각 국가의 보고를 권고함

자료: KoFD 외, 2016, 알기 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

2) 지자체 국제개발협력의 역할

-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고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해온 지자체들의 경험을 중요한 자산으로 삼을 필요가 있으며, 최근에는 수원국 또는 협력대상국의 지자체를 비롯하여 공여국의 지자체나 지자체연합 사이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음(UCLG, 2009)
- 국제개발협력에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를 시작으로 1996년 2차 유엔인간정주회의, 2001년 유엔총회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지속되었으며,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원조 효과성을 높이는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2005년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파리선언, 2008년 아크라 행동계획, 2011년 부산에서 열린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재확인되었음
- ODA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이해가 높아 파트너가 되는 개도국의 지방정부와 다양한 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지자체는 중앙정부보다 지역 공동체와 주민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를 많이 제공해 왔기 때문에 파트너 지방정부의 지역사회의 삶을 개선하는 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증진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원조가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됨(UCLG, 2011; 조현주 외, 2015).

[표 3] 지방정부 ODA의 특성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차원에 비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 - 중앙정부 ODA에 비해 보다 선택적·집중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하다는 점에서 비교우위가 있음 - 분권화 혹은 다층적인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지방정부 ODA의 책무성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DA 프로그램 자체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경제위기 등에 취약함 - 다양한 원조 주체간의 협력과 조화를 저해할 수 있음 - 원조 분절화가 심화될 수 있음

자료: 조현주 외, 2015, 267-269쪽.

- 물론 국가별로 지방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수준에 따라 지자체 ODA의 수준이나 규모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¹⁾ 국내 지자체 ODA도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상이한 주제와 형태로 ODA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아래에서는 국내·외 지자체 ODA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충청남도의 ODA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충남 ODA 사업 추진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1) 유럽의 경우 스페인과 독일에서 지자체 ODA가 국가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2003년 기준, 지방정부의 ODA 규모는 독일이 687.3백만 달러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321백만 달러인 스페인임. 국가가 집행하는 ODA 중 지방정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과 2003년 평균을 기준으로 스페인이 18%로 가장 높았음(OECD, 2005)

1)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의 개발협력 가이드라인²⁾

- 독일은 세계적으로 ODA에 대한 기여비중이 높은 나라로 2013년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비율은 0.38%를 기록하고 있으며, 독일 내 16개의 연방주들은 자체적으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박광동 외, 2014)
- 2008년 연방주에 적용되는 개발협력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었고, 라인란트팔츠(Rhineland-Palatinate)와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와 같은 일부 연방주는 지역 상황에 맞는 개발정책 가이드라인을 독자적으로 설정하여, 지역의 특성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고자 함
- 교육과정에 국제개발협력 과목 포함, 공정무역 촉진을 위한 경제 정책,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등 다른 분야의 정책에 영향을 미침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강조하는데, 2013년 2월 새로운 개발정책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1,500명의 시민, 120개의 시민 조직 및 기관들의 참여와 자문 과정을 거쳤음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영역을 지원하고 계획의 추진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협력을 위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재단을 설립하고, 공정무역, 고효율 화덕 보급 지원을 통한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과 산림 보호 등의 사업을 진행함

2) 이 내용은 German Federal States in Development Policy 인터넷 웹사이트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http://www.entwicklungspolitik-deutsche-laender.de/>)

2) 스페인 카탈루냐주의 ODA³⁾

- 스페인의 ODA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최빈국 지원에 집중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경우 비정부기구 및 시민사회를 통한 무상원조를 주도하고 있음⁴⁾
- 스페인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게 각자 개발협력계획을 세우는데 카탈루냐주는 자체 개발협력기관(CADC)을 통해 주로 평화구축과 개발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활동을 포함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2003년 CADC에 의해 집행된 원조의 2/3는 개도국 사업을 위해 쓰였으며 나머지는 긴급 구호와 같은 인도주의적 지원과 카탈루냐주의 원조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쓰였음
- 프로젝트성 원조는 개발협력계획의 분야별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는데, 카탈루냐는 35%는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제공, 32%는 생산성과 고용 증대, 18%는 거버넌스를 위해 사용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음
-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스페인은 개발협력과 개발원조 기금을 대폭 줄였으나, 카탈루냐주는 아프리카 지역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CACD를 통해 2,200만 유로를 집행하겠다고 공언하고 동시에 우선적으로 100만 유로를 케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지부티에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에게 지원하는 등, 국제개발협력의 기초를 유지하고 있음
- 또한 실행과정에서 비정부기구를 활용함으로써 복잡한 과정에서의 기회비용을 절약하고 동시에 효과를 높이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음

3) 스페인 ODA 및 카탈루냐주 ODA 내용은 Jorge et al.(2011) 및 Catalan News Agency 기사를 참고하여 정리함

4) 스페인 중앙정부의 ODA는 주로 정부에 의해 집행(87%)되는데 반해, 자치지방을 비롯한 지방정부의 ODA는 비정부 기구에 의해 집행되고 있음. 지자체 ODA 중 비정부기구에 의해 집행되는 비율은 50~67%에 달하며 금액도 중앙 정부가 비정부기구를 통해 집행하는 ODA 금액보다도 큼

3) 일본 기타큐슈시 녹색도시 ODA⁵⁾

- 일본의 ODA 사업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비중은 2009년 기준 0.5% 정도이나, JICA의 풀뿌리 기술협력이나 CLAIR의 프로젝트를 통해 지자체 자체의 국제협력 사업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지자체 자체사업은 2005년 기준 일본 ODA 사업 대비 0.9% 수준)
- 일본 지자체의 국제협력은 개도국 전문가 및 관료의 훈련, 개도국으로 전문가 파견,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연구 진행, 세미나와 컨퍼런스 개최, 국제기구와 파트너십 구축, 국제적인 도시간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이루어짐
- 1960년대 일본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지역이었다가 1971년 이후 환경개선에 투자하여 녹색도시로 변모한 기타큐슈시는 지난 30년 동안 환경기술을 주제로 한 국제환경협력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
- 기타큐슈시는 1980년 설립한 ‘기타큐슈 국제기술협력협회(KITA)’를 통해 환경기술의 국제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995년부터 일본 국제협력사업단(JICA)의 ODA 사업을 통해 중국 대련의 환경 보호를 위한 오염방지 및 청정생산계획을 제안하고 환경기술 이전 및 환경기업 진출을 지원해 옴
- 기타큐슈시는 1997년부터 아시아의 국제적인 자원순환과 환경산업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중앙정부 보조금을 이용하여 재활용 기업들을 유치하였으며,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 및 아시아 지역 도시들(18개국 62개 도시)과 생태도시 협력 사업을 추진 하였음
- 이밖에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과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 동아시아연구센터, 아시아 여성교류 연구포럼 등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 대한 교육·연구와 학술행사를 지원하고 있음

5) 다음 문헌을 참고해 정리하였음. Takao, Tasuo, 2014, “Local Levels of Participation in Japan's Foreign Aid and Cooperation: Issues Arising from Decentralized International Cooperation,” Asian Survey, 54(3), 540-564.

4) 강원도의 ODA

- 강원도는 ODA 인력 양성 및 도시 지속가능성 분야의 ODA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04년부터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몽골 튜브도내 강원도농업타운 조성·운영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 유엔 해비타트(UN-HABITAT)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도시훈련센터를 설립하고 저개발국가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화 능력개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2010년부터 KOICA 등 정부 ODA 사업에 참여하여 ‘새마을운동과 지역활성화 과정’을 운영하고, 2014년부터 3년간 몽골 자카르타주 응급의료체계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강원도는 ODA 사업 추진을 위해 2012년 국제협력실을 확대 개편하여 글로벌사업단을 신설하고 국제교류, 수출, 외자 유치, 남북경제협력 등 해외마케팅 기능을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음
- 국제도시훈련센터 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ODA, UNDP 신탁기금, 대기업 민간자본 등을 유치하고 있음
- 강원도는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외 ODA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자체 ODA 사업인 강원도농업타운 조성·운영 사업을 정부의 의료·농업분야 ODA 사업과 연계하고 있으며, KOICA 영월교육원 설립,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및 대학 등이 참여하는 공동 사업 모색을 통해 강원도 내 ODA 관련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5) 경상북도의 ODA

- 경상북도는 2005년부터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개발도상국 현지주민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마을 조성 사업과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음

- 경상북도의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은 물질적 원조를 넘어서 새마을교육을 통한 자립의지의 강화라는 ‘경북형 새마을 ODA 모델’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최근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이 ODA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예산투자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경상북도 새마을과와 KOICA가 주축이 되어 예산집행과 교육훈련, 현지사업 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총괄사업기관으로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이밖에 KOICA ODA 교육원, KOICA 현지사무소, 경운대학교 새마을아카데미가 교육훈련 및 사업평가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임한성, 임재강, 2013)

6) 충청남도의 ODA

- 충남의 국제교류는 자매결연을 맺은 6개 지자체, 우호협력을 맺은 18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 지역별로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아르헨티나, 폴란드의 각 1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우호협력 지역까지 포함하면 중국(9), 러시아(2), 일본(2), 미국, 독일, 호주, 아르헨티나, 폴란드, 베네수엘라, 베트남, 우크라이나, 브라질, 캄보디아 등의 자치단체와 체결
 - 충남 시·군의 경우 12개 시·군이 7개국 30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13개 시·군이 31개 자치단체와 우호협력을 맺고 있음
 - 주요 교류대상도시는 해외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일본 구마모토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1996년 설립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에 창립회원으로 가입
- 충청남도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체계적인 추진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충남농업기술원이 2013년부터 ‘저개발국 선진농업기술개발’ 프로그램을 부탄, 네팔, 동티모르,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단기간(3주)에 걸쳐 운영하고 있고, 아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아프리카 농업 개발’ 프로그램(2개월)을 운영하고 있음(충남농업기술원, 2014).

1) 국내·외 지자체 ODA 사례의 시사점

- 국외 지자체 ODA 사례의 시사점으로 ①지자체의 ODA에 대한 관심과 의지 고양, ②지역 내 ODA 관련 주체들의 역량 강화 및 참여 촉진, ③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와의 연계, ④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적 관점의 지자체 ODA 사업 구상 필요를 꼽을 수 있음
- 국내 지자체 ODA 사례의 시사점으로 ①지자체의 전략과 역량을 고려한 ODA 비전과 전략 수립, ②조례와 기금 등 ODA 인프라 구축, ③지역과 국내외 잠재자원을 연계한 원조효과성 제고, ④자매우호도시 교류를 넘어서는 ‘지구촌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을 꼽을 수 있음

[표 4] 국내·외 ODA 동향 및 지자체 ODA 사례의 시사점

국내·외 동향의 시사점	지자체 ODA 사례의 시사점	
	국내	국외
① 유엔 SDGs 및 후속 실행전략을 반영한 ODA 목표 및 실행전략 설정	① 지자체의 전략과 역량을 고려한 ODA 비전과 전략 수립	① 충남의 ODA에 대한 관심과 인식 증진
	② 조례와 기금 등 ODA 인프라 구축	② 충남 내 ODA 관련 주체들의 역량 강화 및 참여 촉진
	③ 지역과 국내·외 잠재자원을 연계한 원조효과성 제고	③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와의 연계
② 협력대상국 및 국내 지자체의 지역적 맥락 반영	④ 지구촌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	④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적 관점의 충남 ODA 사업 구상 필요
③ ODA 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ODA 추진		

2) 충남의 ODA 사업 추진방향

- 먼저, 충남 ODA의 기본원칙 정립이 요구되며, 세부적으로 국제사회 및 국내 ODA 규범을 반영한 충남 ODA 원칙 수립,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충남 내 해석·적용, 충남형 행복 ODA 브랜드화 추진이 필요함

[표 5] 충남 ODA의 기본원칙 정립

추진방향	세부 추진방안	주요 내용
충남 ODA의 기본원칙 정립	국제사회 및 국내 ODA 규범을 반영한 충남 ODA 원칙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기업의 해외 진출 - 인도적 지원 및 협력대상국의 빈곤과 사회문제 해결 -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충남의 인지도 상승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충남 내 해석·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지표 검토 - 충남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연계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의 연계
	충남형 행복 ODA 브랜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닌 지방화된 규모의 대안적 ODA 사업 추진 - 충남의 내발적 지역발전 담론 반영 - 도정철학인 '행복'을 키워드로 한 ODA 원칙 구상

- 둘째, 충남 ODA 추진 기반 조성이 요구되며, 세부적으로 국제개발협력 또는 ODA 지원 조례 제정, 충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가칭) 수립, 충남 ODA 재원 확보 추진이 필요함

[표 6] 충남 ODA 추진 기반 조성

추진방안	세부 추진방안	주요 내용
충남 ODA 추진 기반 조성	국제개발협력 또는 ODA 지원 조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국제교류·협력 조례에 ODA 지원 규정 추가 - 또는 ODA 지원조례 제정 (경기도 사례)
	충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가칭)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ODA의 비전과 전략 - 충남 ODA 추진체계 - 연차별 ODA 사업
	충남 ODA 재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개발협력기금(가칭) 조성 - 외교부 및 코이카 ODA 사업 연계 - 지역기업들의 ODA 사회공헌활동 유도 - 국제기구 ODA 사업 연계

- 셋째, 충남 ODA 추진 조직의 구성이 요구되며, 단계적으로 연관 사업 추진 조직에 ODA 사업 추가, 국제교류·협력 조직의 신설, 코이카의 지역별 국제개발협력센터 활용, 충남 내 ODA 관련 센터 설립이 필요함

[표 7] 충남 ODA 추진 조직의 구성

추진방안	세부 추진방안	주요 내용
충남 ODA 추진 조직의 구성	연관 사업 추진 조직에 ODA 사업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ODA를 추가 - 가령,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 충남 적정기술에듀파크 사업 등에 관련 분야 ODA 사업 추가
	국제교류·협력 조직의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교류추진위원회 또는 국제교류추진단 구성 시 ODA 분과 포함 - ODA 포럼, 충남 ODA 계획수립, 네트워크 형성 등의 역할 수행
	코이카의 지역별 국제개발협력센터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이카의 지역별 지자체-대학 연계 ODA 지원 센터 설립 사업 - 충남 내 ODA 사업 추진 역량을 갖춘 대학과 충남ODA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충남 내 ODA 관련 센터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자체적인 ODA 사업 추진을 위한 ODA 센터 설립 - 필요시 국제기구 및 국가의 지원

- 넷째, 충남 ODA 추진을 위한 협력 네트워킹 강화가 요구되며, 세부적으로 충남 ODA 주체 발굴, 충남 내 정부기관, 대학, 연구기관, NGO, 기업의 ODA 활동 지원, ODA 추진 NGO 지원이 필요함

[표 8] 충남 ODA 추진을 위한 협력 네트워킹 강화

추진방안	세부 추진방안	주요 내용
충남 ODA 추진을 위한 협력 네트워킹 강화	충남 ODA 주체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내 대학의 ODA 사업 현황 검토 - 충남 및 시·군의 ODA 사업 현황 검토
	충남 내 정부기관, 대학, 연구기관, NGO, 기업의 ODA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내 대안적 지역발전 주체들의 ODA 사업 참여 지원 - 충남 인근 국책연구기관과의 ODA 사업 협력
	ODA 추진 NGO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이카 민관협력사업 공모 지원 - NGO 대상 충남 ODA 공모 사업 추진

- 마지막으로, 충남 ODA 중점사업 발굴이 요구되며, 세부적으로 중점협력대상국과 협력 지자체 선정, 중점협력분야 설정, 충남 현안사업의 ODA 사업화를 통한 상호 편익 증진이 필요함

[표 9] 충남 ODA 중점사업 발굴

추진방안	세부 추진방안	주요 내용
충남 ODA 중점사업 발굴	중점협력대상국과 협력지자체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DA 중점협력국 대상 충남 국제교류 · 협력 지자체 확대 - 중점협력국가와 협력지자체의 ODA 수요 조사 및 지역연구 수행
	중점협력분야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국제교류 · 협력사업의 ODA 사업화 - 기존 ODA 사업의 심화 - 충남 전략사업의 ODA 사업화
	충남 현안사업의 ODA 사업화를 통한 상호 편익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현안사업의 ODA 사업화 - ODA를 통한 대안 모색 및 국제협력 강화

3) 충남 ODA 중점사업 제안

- 충남의 ODA 중점사업으로 사회적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기존 농업 · 농촌 ODA의 확장, 적정기술 ODA, 경제적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공정무역과 ODA, 사회적기업과 ODA, 세계유산(자연유산, 문화유산) 등재 및 생태 · 문화관광 지원, 환경적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사업 지원,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지원 등을 제안함

[표 10] 충남 ODA 중점사업 제안

분야	중점사업
사회적 지속가능성	기존 농업 · 농촌 ODA의 확장
	적정기술 ODA
경제적 지속가능성	공정무역과 ODA
	사회적기업과 ODA
	세계유산(자연유산, 문화유산) 등재 및 생태 · 문화관광 지원
환경적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사업 지원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지원

- 충남이 ODA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충남의 경제·사회·환경적 활동들이 전지구적 수준에서 복잡하게 얽여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책임을 함께 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임
- UN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비추어볼 때, 미래 ODA는 보다 많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공여국과 협력대상국 서로에게 상생적이고 함께 책임을 지며, 지역적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적인 문제를 동시에 다루고, 보다 혁신적인 사업과 재원을 개발하도록 추동될 것임
- 국내·외 지자체들은 국제개발협력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며 ODA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동시에 지자체 ODA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꼼꼼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충남 ODA 사업 추진을 위해 충남의 국제개발협력 역량이 강화되고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충청남도의 지역발전 목표로 번역하고,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토록 지원해야 함
- 충청남도의 ODA 사업의 발굴 시에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지자체 ODA의 전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 필요하며, 특히 충남의 지역 간 균형발전, 내발적 지역발전, 경제-사회-환경의 상생을 유지하는 지속가능발전 등의 정책 목표와 경험들을 ODA 사업에 녹여낼 필요가 있음

- 충남의 새로운 지역발전 비전으로서 ‘행복’을 키워드로 삼는 국제개발협력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며, 사회적경제, 행복지표, 3농혁신, 마을만들기, 적정기술, 금강비전의 에코뮤지엄 구상, 생태복원 등의 사업은 충남의 내발적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인 동시에 저개발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모범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여 형 범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

041-840-1276, hbyeo@cni.re.kr

※ 본 리포트는 2014년 정책현안과제 「Post-2015 개발목표의 등장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2015년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충남 ODA 사업 추진방향 연구」를 재구성해 정리한 내용임.

◆ 참고 자료 ◆

국무조정실, 2014, 대한민국 ODA 백서

문도운, 2014, “새천년개발목표의 한계와 Post-2015 개발목표의 내용”, KoFID Post-2015분과 Issue Brief 제12호.

박광동 외, 2014, 지자체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소영, 2014, 지방자치단체의 ODA 사업추진방안, 지방자치 Focus 제87호.

임한성, 임재강, 2013,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의 성과평가,” 국가정책연구 27(4).

조현주, 박건운, 정현주, 2015, “한국 지방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 지방의 세계화 수준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29권, 제1호(통권 100호), 261-289.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2014, 2014년도 저개발국 선진농업기술개발과정 연수결과 보고서.

하현선, 2014,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14, 개발학 강의, 푸른숲.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교육원, 2013, 국제개발협력 첫걸음.

Jorge Gutierrez-Goiria et al., 2011, “Rethinking Development in an Age of Scarcity and Uncertainty”, 19-22 Sep. 2011, University of York. UK

OECD, 2005, Aid Extended by Local and State Government, Pre Print of DAC Journal 2005, 6(4).

Takao, Tasuo, 2014, “Local Levels of Participation in Japan's Foreign Aid and Cooperation: Issues Arising from Decentralized International Cooperation,” Asian Survey, 54(3), 540-564.

UCLG, 2011,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Policy Paper: Development Cooperation and Local Government

UCLG, 2009, UCLG Position Paper on Aid Effectiveness and Local Government: Understanding the link between governance and development.

UN,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충남리포트(2016년도)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6-01	행복한 성장을 위한 꿈과 도전, 충남경제비전 2030	강현수 외 2명	2016.01.04
2016-02	공공부문 개혁 요구와 충남에 대한 시사점	김대호	2016.01.07
2016-03	민주주의 패스포트를 통한 로컬거버넌스 구축 방안	김욱 외	2016.01.14
2016-04	금강 중·하류의 물 환경 특성과 큰빛이끼벌레 서식에 따른 대응방안	정종관	2016.01.20
2016-05	충청남도 제조업 개별입지 관리방안	오용준	2016.01.28
2016-06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	김용현	2016.02.04
2016-07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윤태범	2016.02.12
2016-08	충청남도 지역경제 생산성의 특징과 정책 과제	이종윤 · 임재영	2016.02.17
2016-09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의 발전방향과 추진과제	한상욱 · 임형빈	2016.02.19
2016-10	지역에너지 전환과 충남의 에너지정책 방향	여형범	2016.02.24
2016-11	충남 기초공간데이터 구축을 통한 자연마을 과소 · 고령 실태 분석	윤정미	2016.03.03
2016-12	충남 상생산업단지 정책의 성공전략과 추진과제	장수명 외 2명	2016.03.10
2016-13	충남 경제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정책지원 방안	김태연 외 2명	2016.03.17
2016-14	충남도 에너지 정제 · 저장시설 입지지역 지원방안	이민정	2016.03.23
2016-15	충남 중대형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현황과 발전전략	홍원표	2016.03.30
2016-16	충남형 지방재정 확충 방안	안연환 외 2명	2016.04.06
2016-17	충남 포괄적 도민안보체제 구축 방향과 과제	김창수	2016.04.14
2016-18	충남 사업장 폐기물 발생 현황과 매립지 갈등 대응 방향	장용철	2016.04.21
2016-19	충남 어촌 · 어항의 공공디자인 적용 방안	이충훈	2016.04.28
2016-20	충남 지역행복생활권 실태분석과 추진 방향	임형빈 · 한상욱	2016.05.06
2016-21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충남 버스 교통정보체계 구축 방안	김원철 · 정민영	2016.05.12
2016-22	충남 소규모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이관률	2016.05.19
2016-23	충남형 경로당 활성화와 노인 복지	김필두 · 윤준희	2016.05.27
2016-24	충남 폐염전 · 폐양어장 생태복원과 활용방안	장동호 · 이상진	2016.06.02
2016-25	2040년 충청남도 시 · 군 인구추계와 정책과제	심재현	2016.06.08
2016-26	체계적 환경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충남형 환경보건 DB 구축 필요	명형남	2016.06.17
2016-27	충남 교통SOC 현황과 정책방향 -도로, 철도 분야를 중심으로-	김형철 · 장준용	2016.06.22
2016-28	농민기본소득제, 충남도 농촌마을에서 실험하자	박경철 · 강마야	2016.06.30
2016-29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축 방안	박경철	2016.07.07
2016-30	충남 시 · 군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지원방안	최영화	2016.07.14
2016-31	전국과 충남의 미세먼지 현황과 정책제언	명형남 · 김순태	2016.07.21
2016-32	충남 문화유산과 연계하여 전통축제를 육성하자	이인배 외 2명	2016.07.28
2016-33	충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탄소상쇄 활성화 전략	표정기 · 이상신	2016.08.04
2016-34	충남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사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조영재	2016.08.11
2016-35	자치단체 세외수입의 문제와 개선과제	고승희	2016.08.19
2016-36	충남 어업 · 어촌 6차산업화를 위한 정책제언	김종화	2016.08.25
2016-37	충남 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일자리정책 과제	이상호	2016.09.02
2016-38	충남의 농자재 지원정책 개선방안	강마야	2016.09.08
2016-39	시민운동으로서 제2새마을운동 추진방향	성태규	2016.09.22
2016-40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 활용을 통한 충남 에너지 전환	황순원 · 김은경	2016.09.30
2016-41	충청남도 소득격차 원인과 개선방안	김철희 외 2명	2016.10.06

▣ 충남연구원 홈페이지(www.cn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